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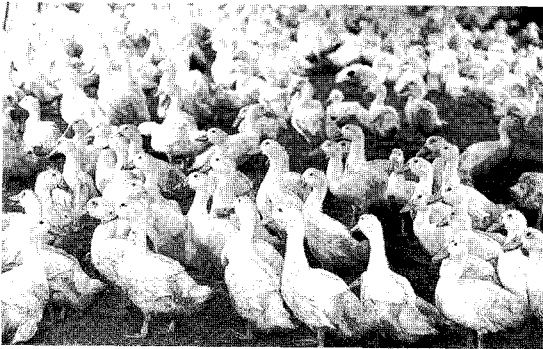
한국 농어민 신문 <김영민 기자>

2009년 8월 24일자 (제2171호) '건강식품'으로 각광...생산액 1조 돌파

2009년 8월 27일자 (제2172호) 생산기반 취약...질병 위험 노출 '무방비'

# 급성장하는 오리산업

## ① 성장 배경



오리산업이 지난해 농림업생산액 1조1544억원을 기록하며 축산업의 주요 축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오리산업이 농림업 생산액 1조원을 돌파하면서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오리산업이 소, 돼지, 닭에 이어 당당히 축산업의 주요 축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생산기반 취약과 농가 경영 마인드 부족이라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오리산업의 성장세의 원인과 축산업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잡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다.

웰빙 바람 타고 젊은층 소비 확산

'1인당 월 150g' 군납 시작도 한몫

전업화·규모화로 사육가구수는 감소

## ● 축산업 주요 축종으로 등장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지난해 농림업 생산액 가운데 오리는 1조1,544억원을 기록하며 축산업 가운데 돼지, 한우, 우유, 닭, 계란에 이어 6위를 차지했다. 또한 전체 농림업 가운데서는 7위를 차지하는 등 생산액만 놓고 보면 농업 주요 품목으로 자리잡았다.

2005년 생산액 6,490억원, 2006년 6,480억원, 2007년 5,824억원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두드러지는 성과다. 2007년과 비교한 증감률은 98.2%로 상위 30개 품목 가운데 단연 1위다.

이와 함께 오리사육 구조도 소규모 농가에서 점차 전업화, 규모화 되고 있는 추세다. 정부의 기타가축통계에 따르면 오리 사육규모별 가구수는 2005년 8,921호에서 2006년 8,456호, 2007년 7,184호, 2008년 5,192호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사육규모별 마리수를 보면 5,000수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의 사육마리수가 전체 사육규모의 약 77%를 차지해 규모화와 전업화가 급격히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오리산업이 축산업은 물론 농업의 주요 품목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면서 산업의 위상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농식품부의 품목별 대표조직에서 당초 오리는 제

외됐으나 최종 29개 품목을 확정하면서 당당히 단일 품목으로 자리를 꿰찼다. 그만큼 오리산업이 농업의 주요 품목으로 성장했음을 정부도 인정한 것이다.

이강현 한국오리협회 전무는 “오리산업이 성장세에 있지만 막연히 오리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산업에 진입하기보다는 규모화와 시설 현대화를 이뤄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 소비확대가 성장의 주요 원인

이처럼 오리산업이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 오리고기에 대한 소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과거 보양식으로 중장년층의 각광을 받던 오리고기는 최근 웰빙과 다이어트 바람을 타고 건강식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젊은 소비자들까지 불러 모으고 있다. 실제로 오리협회가 지난 5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6%가 오리고기를 선호한다고 응답해 젊은 층의 소비확대 가능성을 보여줬다.

여기에 미량이지만 군납대상에 오리고기가 포함된 것도 오리고기 소비 확대에 고무적인 일이다. 비록 군장병 1인당 월 150g씩 제공해 물량은 크지 않지만 젊은 층을 대상으로 소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업계에서는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이에 따라 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회원들이 거출한 자조금으로 젊은 소비층을 겨냥한 다양한 오리고기 소비촉진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대학교 축제를 방문해 무료 시식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중복을 맞아 노인복지 센터에 오리고기 후원 시식회를 연 것이 그 일환이다. 올해 자조금의 예산도 소비촉진 홍보에 3억4,000만 원을 투입해 TV 간접광고 협찬, 영상물 광고, 지역축제 등 소비촉진 홍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강현 전무는 “소비를 한꺼번에 늘리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면서 “조금씩 소비자들에게 오리고기가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소비촉진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리산업이 안정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취약한 생산기반 극복과 같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오리데이 행사 장면.

## ② 발전 방안

오리산업이 축산업의 주요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생산액이 불과 1년 사이 2배에 가까운 98.2%의 성장률을 보인 것은 보기 드문 경우다. 물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라는 변수가 있었지만 성장세가 눈에 띄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러나 취약한 생산구조와 산업의 성장에 따른 정책적 뒷받침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1~19마리 사육농가, 전체의 67.8% 부업수준 상당수가 비닐하우스나 무허가 축사서 길러

### ● 취약한 생산구조 극복해야

오리 사육농가는 지난해 12월 기준 5,192호로 점차 농가수가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1~19마리를 사육하는 농가가 3,520호로 전체 농가수의 67.8%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부업형태의 사육구조를 띠고 있다. 다만 소규모 농가들이 줄어들고 있어 산업의 규모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실제로 200마리 미만의 사육농가 수는 2006년 7,118호에서 2007년 6,166호, 2008년 4,382호로 크게 줄고 있다. 반대로 지난해 5,000수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의 사육마리수가 전체 사육규모의 약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면 수치상으로도 규모화와 전업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

는 상태다.

### 안정적 공급위한 통계·관측시스템 구축 시급

#### 「음식점원산지표시제」 대상품목 포함시켜야

이처럼 오리산업이 소규모 생산구조를 탈피해 규모화와 전업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생산기반은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많은 오리농장들의 농장구조는 가설건축물인 비닐하우스나 무허가 축사가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있어 자연재해나 AI와 같은 질병이 발생할 경우 위협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이럴 경우 농가들이 산업에 다시 종사하거나 재기하는 경우가 드문 것도 안정적으로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생산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오리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하우스 형태의 축사 시설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파이프 하우스 축사나 비닐하우스 시설을 개조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다 보니 농가들의 방역 의식 수준이나 고품질의 오리고기 생산과 같은 의식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이창호 한국오리협회장은 “산업의 성장 속도에 비해 농가들의 의식수준은 아직 걸음마단계”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축사시설이 현대화만 된다면 AI와 같은 질병예방을 위한 상시방역체계도 약 80%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지원을 당부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도 “생산기반이 취약하다 보니 각종 위협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며 “무허가 농장이나 시설이 취약한 농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 ● 제도적 뒷받침 병행해야

오리업계는 산업의 양적 성장에 걸 맞는 정책적 뒷받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오리산업의 안정적 성장 및 수급을 예측하고 각종 지원이나 제도의 구상에 필요한 통계나 관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오리와 관련된 통계는 1년에 1회 발행하는 기타

가축 통계로 지역별과 호별 사육두수만 제공되고 있다. 소, 돼지, 닭은 통계청에서 분기마다 통계를 발표해 수급을 예측할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다만 종오리 DB(데이터베이스) 사업이 실시돼 그나마 종오리 농장의 사육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수급예측이나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높인 것이 위안이다.

아울러 오리산업이 외식산업과 동반 성장한 점을 들어 음식점원산지표시제에 오리고기 포함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오리고기는 가정에서 소비되는 것보다 음식점소에서 소비되는 비중이 다른 육류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 사실이다. 업계는 오리고기가 음식점소를 통해 소비되는 비중이 전체 소비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원산지표시제 도입을 통해 저급의 수입 오리고기가 국산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강현 오리협회 전무는 “중국산이 국내 소비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둔갑판매로 인해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는 엄청나다”며 “음식점원산지표시제 대상 품목에 오리고기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오리산업도 육계에 버금가는 계열화가 돼 있는 상황인 만큼 계열업체와 농가간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는 것도 산업발전을 위한 길이다. 육계가 농가와 계열업체간의 신뢰 부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점을 학습해 계약관계나 유통구조 문제 등에 대해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병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책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것들은 정책으로 지원을 해야겠지만 농가들도 방역의식 고취나 고품질의 오리고기 생산 등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오리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